

날세운 한국당... 청문회·추경·사드 '전운'

“이제 협치 없다”... 여야정협의체 불참 선언

강경화·김상조 청문회 난관...사드 진통 클 듯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의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여야의 허니문은 20여일 만에 종료되는 듯한 분위기다.

한국당이 1일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어 강경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신성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어낼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정의가 각성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협치 중단과 마이웨이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정례 원내대표회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화동 자체가 무산되진 않았지만 제1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협치 구도는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청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아 그냥 넘기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인 추경안 심사도 협로가 예상된다. 여권은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공공부문 일차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전일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사드 해법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큰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6월 국회가 개시되자마자 지리발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한껏 몸을 낮추며 야권이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 더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낙연 총리도 취임 이틀남인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줄줄이 예방한 뒤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시도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 연석회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野 찾아 90도 인사...몸 낮춘 이낙연 총리

“협치 도와달라”...한국당, 인준안 강행 불만 ‘사절’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 소통을 다짐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전날 임명동의안 가결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먼저 찾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워낙 소탈하고 권위주의가 없는 분이니 아주 통글고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총리는 “박 비대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크게 늦지 않게 출범하게 됐다”며 “박 비대위

원장은 제가 스무살 시절부터 늘 흠모하고 따르던 형님이어서 앞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씩 계속 기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예방, “김 원내대표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4년 차이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많은 것을 상의드리고 지혜를 얻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 총리는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찾아 90도 인사를 하며 몸을 낮췄다.

주 권한대행은 “대통령도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성공한 총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고,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씀했다”며 “늘 민생의 문제는 총리가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리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예방하고선 “쫓돌 앞에 피고인으로서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쫓돌민심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심 대표는 “적

대적 대결관계가 비판적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리가 소통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났다.

추 대표는 이 총리에게 “민주당 정부인 만큼 정책에 있어서 당이 제대로 뒷받침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정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면서 함께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잘 섬기겠다. 다른 정부의 모든 부처 각료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당정과 야당관계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예방하려 했지만, 정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인준안 처리 강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사절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

중소기업벤처부 격상...소방청·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내주 정부조직법 발의

여권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통상 담당 조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법 편에서 ▲산업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국민

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내용만 남아 정부조직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권은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수정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FTA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급박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외교부 산하에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처럼 만들어 힘을 실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문을 제외한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소방청·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우원식,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면담

목포신항 방문 현장행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세월호 선체 수습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으로 향한다.

‘스크린더어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방문한 이후 두번째 현장 행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여 명의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국회 차원에서 더 지원할 것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대표단은 선체 수색 진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수습현장도 직접 살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고서 세월호 수습현장 점검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여러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단이 꾸러지고서 진척에 목포신항을 방문하려 했었다”며 “청문회, 추경, 사드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세월호 수습현장 점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년 전 이때때 조선의원들이 등원을 하러 왔고 세월호 현장 찾았었다”며 “대표단에 조선의원들도 많은 만큼 내일 세월호 수습현장 방문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지난날 31일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및 ‘SNS소통 TF’를 설치, 강력 대응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알아서 대응한 다음에 관련 입법 단계에서는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바른정당 정영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이 오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야권에 문자폭탄 법적대응 제안

자유한국당이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폭탄’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 등 야권에 공동 대응을 제안, 주목된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법률지원단에서 의원들의 문자폭탄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며 “법률지원단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문자폭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야 3당이 공통으로 느낀다”며 “3당이 어떤 공동보조를 취할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날 31일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및 ‘SNS소통 TF’를 설치, 강력 대응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알아서 대응한 다음에 관련 입법 단계에서는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바른정당 정영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이 오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